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 응 배



천안함이 침몰된 지 일주일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 것은 못내 안타까운 일이다.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역시 생사확인이 우선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이번 사태를 보면 아쉬운 것은 군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결정전이나 이라크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황브리핑이나 사건개요는 군 최고책임자 또는 관련 참모층장이 직접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을 가지고 조처를 취하고 관할해야 할 업무자 영역이다. 사건 이후 하루 이틀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아 '상부지시'를 기다린다거나, 대응에 신중을 기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 및 상황진척에 대한 브리핑이 너무 더디다. 생존자들에 대한 언론취재 및 기자회견 금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리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개인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국빈(公僕), 즉 공공영역 및 정치영역에 서비스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로 유명한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얼마 전 "내가 제일보기 역겨운 모습은 자신은 병역을 안 한 공직자들이 검은 옷 입고 국립묘지에 가서 엄숙한 표정 하면서 분향하는 꼴"이라며, "그것이 내가 한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무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병역면제인 경우가 대한

력이야 이해관계를 따져 도움이 안 된다 고 판단되면 뒤로 빠질 것이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임과 권한에는 동시성(同時性)과 상관성(相關性)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선진국에서 고위직에 오를수록 출근시간이 빠르고 퇴근이 늦은 이유도 권한에 따른 책임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군에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대한 집행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청와대 '지령'을 받아 소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무엇이 두려워 언론을 피하고, 생존자들의 기자회견을 통제하고 회피하기 급급한지 알 수 없다.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 언론 앞에 쫓겨가는 대변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매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군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집단도 없다. 또한, 이번사태는 군의 독립적 임무 수행능력과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다. 어찌에 달린 별이 '상부 눈치'보고 얻은 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내실 갖춰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 일자리 종합센터'를 개설했다. 광주 일자리 종합센터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며, 센터를 찾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게 된다. 전남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해 확보한 262억6천400만원과 지역 상생기금 등 338억1천7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 3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실업률이 5%대로 치솟는 등 사상 유례없는 '고용한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려려 지난 1년 새 광주·전남에서 만

관청은 일자리 1천여 개가 사라지는 등 지역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변변한 대기업을 찾기 어려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시장에 접근하기 힘든 소외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부문 형태의 일회성 일자리 창출로는 고용대란을 잠재울 수 없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앞서서 다양한 구직·구인 정보를 확보해 구직자와 구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유치, 구직자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대형유통업체 추가 진출 득보다 실이 크다

인구 대비로 볼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하고 있는 광주에 SSM 2곳이 추가 개점할 예정으로 있어 영세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 남구와 북구에는 대형마트가 출점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상권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테스코가 운영 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오는 6일 서구 풍암동과 치평동 2곳에 330㎡(100평) 규모로 각각 문을 연다고 한다.

홈플러스 풍암점 인근에는 롯데슈퍼와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월드컵 경기장 내 롯데마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상무지구 내에 홈플러스 상무점도 부근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형 마트나 슈퍼마켓의 진출은 곧 영세 슈퍼마켓의 시장 점유율을 의미한다. 이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

을 벌여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라면, 햇반, 삼겹살 등을 시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할인경쟁으로 결국 영세 슈퍼마켓이 치명타를 입었다. 영세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10여 곳에 이르러 기업형 슈퍼마켓도 16곳에 달해 인구 대비로 볼 때 전국 최고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통업체 입점 조정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한다. 광주시의회 역시 조례까지 제정해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으나 단 한차례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광주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無 等 鼓

"깜깜한 속에서 느낌으로 글을 쓴다.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누군가가 글을 읽어주기만 해도 좋겠다."

지난 2000년 8월 노르웨이 북부 바렌스호에서 침몰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에 탑승했던 드미트리 플레스니코프 중위가 남긴 마지막 메모다.

결혼식을 올린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플레스니코프는 출항 직전 사고를 예방했던 지 근무와 십자가를 벗어 부인 물가에 넣었다고 한다. 부인에게 써주었던 사랑의 시 가운데 애도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대 속으로 침몰한다/ 당신의 눈과 영혼 속으로/ 진정한 잠수함 승무원답게/ 거품도/ 소리도 없이..."

천안함 참사는 여러모로 쿠르스크호 폭발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폭발음과 함께 수면 108m 아래 해저에 가라앉아 승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한 이 사고는 러시아 해군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다. 이 역시 이번 천안함 사고처럼 사고 원인과 초기대응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

다. 러시아 정부는 숨기에 급급했고, 초기대응 조치도 미흡했다. 이 때문에 플레스니코프의 마지막 메모가 시신에서 발견되자 구조진 백작어도 몇몇 생명의 건실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이번 '천안함'의 실종자 가족들이 신속한 구조작업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오인한 것이나, 사고 직전까지 주고 받은 연인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 등은 꼭 살았을 것이라고 믿기 위해 붙들고 있는 '희망의 끈'이다. 이 끈마저 놓아버리면 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그 차고

천안호 '문자'



깜깜한 절망의 심연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이 기상악화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슬한 바다가 심술을 부리는 사이 46명의 실종자 중 누군가는 마지막 메모를 휴대전화에 남기고 있지 않을까.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천안함' 구조, 軍이 주도해야

공개 못 할 필요가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군과 관련된 문제는 군이 제일 전문가 집단 아닌가.

청와대 지하병커에 모인 안보관계 장관 회의의 면면을 보라. 누가 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일단 대통령부터 총리, 국정원장, 대통령실장, 정책실장까지 군 면제이다. 군 면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하라고 다그칠 수는 있어도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다.

필자도 군 면제인 관계로 평소 군과 관련된 문제나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다. 이 유는 한 가지, 아무리 기준에 미달되었다

민국 말고 또 있던가"라고 말할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고위층은 군대 조직의 원칙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로는 적어도 '정치군인'의 오명은 벗어났다. 그동안 국민의 신뢰도 많이 회복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군대가 정치적인 역학관계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따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복합의 소행'이던, 기피 때문이던, 내부폭발이던 그 후폭풍은 결국 군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기 고

이영우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처럼 교육 열이 높은 부모들도 없다고 한다. 비록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도 자식교육만큼 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욕망을 부린다. 하지만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몹시 우려스럽다.

오는 6월 2일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때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직선으로 치러진다. 학

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위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광역·기초의원, 비례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8명을 한꺼번에 뽑아야 한다. 교육감·교육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기호가 정해진다. 하지만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서도 순번 배정

내 아이의 미래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교원영위원이 간접선거로 뽑던 교육감이 2006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직접선거로 뽑게 되는데 16개 시·도 교육감 전체를 직선으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2010년 2월 26일 공포·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대표·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에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과 관련성이 큰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등도 교육관련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에 교육감·교육의원(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가 금지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자 교

이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방식이든 후보자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은 그 순서를 정당 기호로 오해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직선제로 처음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 등으로 소위 '묻지마' 선거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바닷길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예비후보자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그들이 내건 공약을 잘 살펴보자.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어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 거보다 더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모두 자녀의 일처럼 우리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주무관)

의료 칼럼

김신곤



외과 수술이란 신체의 병든 부위를 제거하거나 교정하고, 시술한 부위를 가능한 원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복원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수술 중에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가 필요하고, 병 자체나 수술 때문에 신체 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종 약물이나 수액 등이 공급된다.

인간의 배 속에는 위를 위시해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장이 있고 간이나 쓸

(腹腔鏡) 수술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쓸개나 맹장, 자궁 등의 수술에 국한했으나 이제는 모든 복부와 후복막 장기의 수술이 이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수한 시술과 장비가 필요해 설치비용이 들지만 한번 설치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많은 중소병원에서도 현재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모적인 일회용 수술 기구 때문에 시술료가 좀 더 비싼 것이 단점이다. 복강경 수술의 경과와 결과를 관찰해

개복술의 발전

개·비장 등이 위치하고 있고, 부드럽고 얇은 천 같은 복막이 전 복강과 장기를 둘러싸고 있다. 배의 후면 즉 등 쪽에 척추와 등 근육과 복강 사이에 후복막이라는 부위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체장·콩팥·대동맥 등이 위치한다.

복부나 후복막 부위 수술 시에 맺가 즉 전면을 통하는 수술을 흔히 개복술(開腹術)이라 칭한다. 수술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각종 조작을 하는데, 수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한 때는 '위대한 외과의는 절개창도 크다' (A big surgeon makes a big incision)라는 관용구가 유행했다.

이러한 고전적인 개복술은 병의 근본적인 수술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수술 후 통증, 감염이나 탈장 등 상처부위 합병증은 물론 장 유착성, 흉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디오 시스템의 발전, 광학의 발달, 자동 봉합기 등 세 수술기구의 발전 등에 힘입어 이 근대 수술방법에 대한 힘이 일고 있다. 큰 절개창 대신에 작은 병목 형태의 기구 삽입구를 몇 개 확보하고, 직접 보고 만지는 것 대신에 모니터 스크린을 보면서 수술하는 복강경

보니, 시술 후 통증이 줄어들고 회복이 빨라 환자는 조기 퇴원하니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이 될 수 있다. 암환자에서 도 경과 관찰에서 재발률이나 합병증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공학은 로봇을 개발해 자동차 조립 등 여러 분야에서 비싼 인건비를 절약하며 인간을 대신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고 있다. 수술도 예외의 일 수 없다. 인간의 손보다 더 예리하게 그리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위까지 로봇 손은 도달할 수 있다. 약 25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인 로봇수술 장비로 시술 비용도 매우 높은 것이 흠이라 아직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지만 곧 보편화되리라 믿는다.

이제 수술받을 환자나 가족들은 같은 병에 세 가지 수술 접근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 받고,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시대가 눈앞에 도래했다.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환자에게 조직 손상을 더 작게 준다 해서 일명 '최소 침습 수술'이라 칭한다. 필자 같은 전립선암에 있는 로봇수술, 쓸개 수술에는 복강경 수술, 3기 위암에는 고전적 개복술을 추천하고 싶다.

(삼우병원 외과 명예원장)

인터넷 판매 중국산 짝퉁 화장품 감독 철저히해야

최근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을 비판 보도하는 것을 보니 일부는 중국산 가짜나 혹은 변질된 제품도 있었다. 그리고 인증번호 제품마다 달라야

하지만 모두 같았다. 이게 알고 보니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짝퉁이었다. 버젓이 국산 화장품으로 팔리는 짝퉁들은 몰과 기름,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화학

약품이 섞여있다고 한다.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 즉 미백효과나 주름 제거, 잡티제거 같은데 필요한 성분은 선전과 달리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화장품 중 진짜 문제는 값싼 샘플 화장품이었다. 지난해 방송의 고발프로그램을 봤더니 쇼핑몰에서 고가의 기능성 로션과 크림 등

샘플 7종을 구입해 성분을 검사했는데 제품을 만든 지 5년이 넘게 지나 성분이 변질된 것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샘플 화장품을 사서 쓴 한 여성이 피부에 이상이 생겨 후유증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당국에서는 인터넷 판매 화장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정은재·광주시 광안구 북쪽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淸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리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제부 2200-641	어촌진흥부 2200-679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222-627 >	사 진 부 2200-691	< F A X 02-773-9335 >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